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부 의지 확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국토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것부터 조속 추진할 것”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과 지역별 피해자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국토부 제1차관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강릉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제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뒷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김윤덕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 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기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

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정부 성공·내년 지방선거 승리 이끌 것”

민주 윤준병 의원, 도당위원장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읍 출신 임승식·염영선 도의원, 고창 출신 김만기 도의원, 전 도의원인 김대중·장기철 씨, 이상길 정읍시의원을 비롯한 지지자 70여 명이 참석해 윤 의원의 출마를 열렬히 환영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권증정부의 성공, 2026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등 중앙행정과 정치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점을 강

조하며 “행정 전문성과 정치력을 겸비한 융합 리더십으로 전북도당을 이재명 정부 성공의 선봉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26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일꾼 선출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반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사적 시험대”라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개혁 공천을 통해 전북도당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으로 압승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시작과 끝을 이르는 해결형 정치인으로서 전북발전의 강력한 엔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다. 윤 의원은 또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해 도당의 문턱을 낮추고 당원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정정래 대표의 개혁 기조에 맞춰 도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준병 의원은 “정읍·고창의 현안 해결사를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해결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북의 재도약을 진두지휘하겠다”며 “전북의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원택 의원의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사퇴 후 전북도지사 출마선언으로 공식이 된 이번 위원장에 신명대 의원에 22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해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분열 넘어 통합으로”

조민규 고창군의회장

고창군수 출마 공식화



선언했다.

조 의장은 현 고창을 ‘분열과 소멸의 위기’로 진단하며, “반쪽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새로운 고창을 위한 5대 약속’을 제시하며 7개 세계유산 기반 ‘글로벌 문화 관광도시’ 조성, 스마트 기술 접목 ‘돈 버는 농축수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오직 성과로 증명하는 ‘일하는 군정’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 주권 시대를 약속했다.

조 의장은 지난 15년간 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제는 싸울 때가 아니라 일할 때”라며, “군립하는 군수가 아니라 군민과 함께 땀 흘리는 고창의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트럼프의 관세 협박·투자 강요 규탄”

전북개헌운동본부, “국가 주권·민생 위협하는 행위
대미 투자에 쓰일 3500억 달러, 국민 위해 써야” 주장

전북개헌운동본부 회원 10여 명이 2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박과 대미 투자 강요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생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충식 전북개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병길 전북평화연대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에 이어 전여농 전북도연합 송미옥 회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이 차례로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본부 박미경 본부장이 낭독했다.

박 본부장은 “트럼프의 협박과 강요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생을 내줄 수 없다”며 “한미 관세 추가협상과 졸속 타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귀국 직후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한미 관세 추가협상 관련 발언을 두고 “정부 설명과 트럼프 발언이 크게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비현금성’이라 했지만, 트럼프는 ‘잔액 현금, 그것도 선불’이라고 공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한 대로 이는 외환위급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 총수들의 백악관 방문



과 관련해 “대규모 대미 투자가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 없이 국가 재정과 산업을 희생시키는 일방적 퍼주기식 합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트럼프의 ‘수천억 달러 선불’ 발언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민생을 불모로 한 협박이자 악탈”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력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국민 1인당 1천만 원 지급, 350만 개 일자리 창출, 농민수당 40년 지급’이 가능한 천문학적 금액”이라며 “이 돈은 미국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주권과 국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이라며 “트럼프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4일 열리는 ‘사회대개혁 시민대회’에 참여해 “한미 협상 전면 재검토를 관철할 때까지 시민사회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2029년 정상 개항돼야”

도내 사회단체 ‘한목소리’

새만금사업법도민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209개 사회단체 임원들이 21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대로 2029년에 반드시 정상 개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만금사업법도민지원위원회 임원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북지방법무사회 이형구 회장이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형구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도민의 오랜 열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최근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항 건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이는 일부 절차적·기술적 보완을 요구한 것일 뿐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부정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흔들림 없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추진, 법원 지적사항 보완, 주요 SOC 사업 신속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